“박정희는 합법정부 탈취 강도” 계엄포고령 위반자 재심 ‘무죄’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1972년 계엄포고령 어겨 징역형
대법 “위헌·무효” 판단…검찰 직권청구로 열린 재심서 무죄

1970년대 유신헌법 사전 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숨진 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1997년 사망)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에 대해 계엄법 위반과 함께 징역형이 내려진 또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일제강점기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씨는 1969년 8월부터 1972년 12월 사이 계모임, 피로연 등 사적 모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2년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금지한다고 정했다.

이씨는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정권에 대해 “명분 없이 합법정부를 탈취했으니 강도다”, “정권을 잡고 각종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20억 불 외상 빚덩이 속에 부정부패를 일삼고 국민 혈세를 강요하니 후안무치한 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까지 거쳤으나 1975년 대법원이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실형 복역 뒤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으며 1997년 1월 숨졌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지난 2022년 “피고인 이씨에게 적용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계엄법 위반죄는 재심사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2018년 해당 계엄포고령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역시 앞선 2013년 “계엄 포고령 1호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이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이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계엄포고 위헌 여부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는 계엄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함께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파기한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행 수단·방법, 검사 구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서선옥 기자

주말 고궁 나들이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의과대학들, ‘교육여건 개선’ 막판까지 고심…일부大 ‘빈칸’도 고려

‘내년 증원’ 32개 의대, 오늘까지 수요조사서 제출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이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서 제출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촉박한 기한 탓에 일부 대학 중에서는 수요조사서를 ‘빈칸’으로 제출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에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서를 마감기한(8일) 내 제출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육여건 현황과 더불어 2025학년도~2030학년도까지의 소요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상당수 대학들은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년치 계획을 세우기에는 상대적으로 기한이 촉박하고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며 “월요일(8일) 제출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회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쓸지, 증축할지, 건물을 새로 지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고려할 게 많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냈다가 판단을 잘못 하면 큰 미스(잘못)가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수요조사서에 개선소요 항목을 ‘빈칸’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대학도 있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당장 1년 후의 계획도 잡히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2030년까지의 계획을 10일 만에 써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적어도 몇 달을 고민하고, 회의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현 상황’만 적었고 나머지는 전부 빈칸으로 적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번 조사에서 요구하는 것의 핵심은 증원 이후에도 기존의 교육환경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대학에서 학생 1인당 사용하는 강의실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가정하면, 증원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도별로 늘려야 하는 공간 면적을 대학에서 조사해서 적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금액과 향후 대학의 투자 계획도 함께 적어내라고 했다. 실험·실습 기자재 1개당 사용 인원과 향후 추가 계획을 비롯해 대학에서 보유한 전임교원, 임상교원, 기초의학 교수 숫자와 2030학년도까지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인원도 교육부는 요청했다.

조사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굵직한 방향을 정해놓은 대학들도 있다.

의대 입학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경상국립대는 증원폭에 맞춰 전임교원 수도 향후 25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 150명~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도 창원에 짓기로 했다.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 학생들이 수련을 받으러 창원 소재 대학병원에 오가야 하는 점을 고려한 구상이라고 경상국립대 측은 설명했다.

49명에서 132명으로 정원이 2.7배 늘어나는 강원대는 의과대학 실습·강의실을 모아놓은 ‘의학 사무관’을 2029년까지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완공 전까지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한 만큼 학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강의실을 개조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실습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공사비와 실습 기자재 1등을 이번 수요조사서에 함께 제출한다.

이번 조사의 취지는 대학에서 교육환경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살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지만, 단순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본과 3~4학년생들의 대학병원 실습과 교수 채용에 관한 문제다.

입학정원이 많아지면 5~6년 뒤 실습 인원도 늘어나게 돼 대학병원을 증축하거나 실습할 병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교수 채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가 내년에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000명을 순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립대는 직접 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요즘은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개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교수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교수 채용, 사람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일까 싶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고흥서 낚시어선·양식장 관리선 충돌

고흥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해 선원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6일 오후 6시 24분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남서쪽 10㎞ 해상에서 9t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7명)와 14t급 양식장 관리선 B호(승선원 4명)가 출동했다. 이 사고로 A호 선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A호의 배꼬리 쪽 일부가 파손됐다.

여수해경은 “B호가 갑자기 옆쪽에서 들어오면서 충돌했다”는 A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거짓 홍보’ 비상장주식 사기 기승

“곧 상장”…거짓 홍보해 거액 투자금 편취

특정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투자하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비상장 주식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당국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만드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사기범 한 사람당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크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추적하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비상장주식에 몰리면서 관련 공동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단기간 고수익”…투자자 울리는 비상장주식 사기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M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24일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M사 측이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기죄 성립이 명확해졌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투자자는 20여명에 이르고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기범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통해 해당 기업이 상장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또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 투자 피해자 8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UHC 배터리를 생산하는 비상장업체 대표 A씨 등 10명이 독자적 기술 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1만8595명에게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하고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허위 내용이 담긴 회사 소개자료와 언론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DART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결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산업 ‘붐’에 편승한 것일 뿐 기술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빌딩 등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피해자들은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계좌 동결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부터 해야”

법조계에서는 불경기로 주식·부동산 등 다른 시장이 침체돼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사기성이 짙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눈독 들이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상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서류 위조와 가격 차트 조작은 물론 금융당국을 사칭한 공문이나 자체 제작한 기사 링크 등 온갖 ‘가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대주주가 함께 움직이는 작전주라고 속이고 우선 매입을 유도한 뒤 잠적하거나 해외 보험사를 이용해 원금보증 약정을 하거나 해외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상장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사기조직은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고 있어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박지영 법률사무소)는 “주로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고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를 동결시켜야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생긴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와 금융기관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미진한 모습이다.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경찰이 홀로 도맡다 보니 수사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에 대해 처분 일체를 금지하는 추징보전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 사건을 다수 수임한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유죄가 선고돼도 일당이 재산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없게 된다”며 “사기조직이 돈을 빼돌리기 전에 빌딩이나 자택 등 돈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수권 기자